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농업인·소비자와 함께 만들어 갑니다.

-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을 수립·발표하였다.

정부는 2001년 제1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25년간 총 5차례의 기본계획을 추진하며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고령화, 물가 상승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2020년 이후 친환경 인증 면적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친환경 인증 면적(ha) : ('01) 1,876(인증제 시작) → ('16) 79,479(저농약인증 완전 폐지) → ('20) 81,827(최대 인증 면적) → ('24) 68,165

특히, 안전·건강에 관한 소비자 관심은 커지고 있으나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고, 생산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비의도적 오염에 의한 인증취소 등으로 친환경 농업인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금년 4월부터 제6차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단을 운영하고 하반기 ‘K-농정협의체 친환경 소분과’를 통해 생산자·소비자·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수립한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은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농지·농업용수·생태계 등 농업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정책목표: 친환경 인증면적 2배 확대(전체 경지면적 대비 ('24) 유기 2.5% → ('30) 5 / 무농약2 → 4) 화학비료 사용량(233kg/ha → 227) / 합성농약 사용량(10kg/ha → 9)

먼저,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를 위해서 ①생산기반 확충, ②수요기반 확대, ③유통구조 개선, ④인증제도 개선 등 4대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다.

첫째, 친환경인증농가 수익성 개선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 친환경농업직불 적정 단가 검토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필지별 지급횟수 제한기준을 완화하여 신규 농가의 친환경농업 전환을 독려할 계획이다.

* 적정단가 고려사항: 관행농가 대비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 등
** (현행) 무농약+유기직불금 지급 횟수 5회 → (개선안) 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5회 보장

이와 함께, 현재 66개소인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확대하고, 기술보급 및 교육 강화 등 다양한 지원 정책도 시행한다. 특히,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 및 중소 규모 농업인 진입장벽을 낮추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또한, 친환경 농업인이 농지를 손쉽게 구하고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농지은행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 특히, 친환경 청년농들이 친환경농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우선 이용, 장기(전환기 포함) 임대 등 지원방안도 병행 검토한다.

둘째, 친환경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공공수요 확대 및 민간소비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재개하고, 농식품부가 공급하고 있는 **취약계층 복지용 친환경 쌀 재배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시 추가 유인책**도 마련한다.

* '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재개(158억원, 16만명에게 매월 4만원씩 6개월간 지급)
** 친환경 벼 재배 면적(ha): ('20) 48,591 → ('22) 38,068 → ('24) 35,670 → ('30p) 73,000

공공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녹색제품 지정**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후부, 지방정부 등 관계 기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일반 소비자도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점차 늘려갈 수 있도록 체험활동,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친환경 농업 전문가를 양성해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특히, 소비자 단체 및 전문가와 함께 **일반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한다.

셋째, 친환경 농산물 유통·판매망을 확충하고 친환경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및 수출 확대 등을 위해 **유기가공식품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자주 접하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형마트, 직거래** 등을 활성화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광역 거점물류센터**에 대해서 지방정부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유기가공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유관 기관, 관련 기업, 친환경 농업인, 소비자, 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한다.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유기가공식품 산업의 규제사항을 발굴·개선한다.

특히, 녹차, 쌀 가공식품, 음료 등 국산 친환경 농산물 확보가 용이하고 해외에서 상품성이 있는 **수출 유망상품 발굴·지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민간 단체 등과 함께 유기가공식품 공동마케팅 등 K-유기가공식품 해외홍보(박람회, 해외바이어 초청 등)도 적극 지원한다.

넷째, 농업인이 안심하고 친환경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친환경농업 인증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농가가 사전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비의도적 원인**으로 오염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해당 농산물은 출하연기 또는 폐기하도록 하여 친환경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EU 등 선진국 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극한 기후 현상, 광범위한 질병 발생**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 한해 친환경 농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예외적 생산 규칙**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친환경 농업의 탄소감축 효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친환경 농업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저탄소 인증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유사 인증제도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고 불필요한 인증 부담을 줄여 나간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모든 농업인 대상 농지 및 수질보전, 생태계 보전, 탄소감축, 가축분뇨 및 영농 폐기물 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첫째, 농지 환경 부하를 개선하기 위해 화학비료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농업용수 수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여부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시킨다. 집중 관리 대상 농업용 저수지를 선정하여 수질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농업용수 전반의 수질 개선을 위해 수질정보 측정 인프라를 확충한다.

둘째, 관행농가의 저투입농법 참여 유도를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화학농자재를 보완·대체하는 자재·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

우선, 저투입 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화학비료·합성농약을 줄일 수 있도록 미생물 농약 등록을 늘리고 국내 활용에 적합한 천적 활용 방제 기술 및 매뉴얼도 개발·보급한다.

셋째,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저탄소 농업 유인 체계 구축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련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을 **탄소중립직불제**로 확대·개편하고, 농업분야 탄소 감축 실적 시장거래 및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보급 등도 지원한다.

넷째, 농업부산물 및 가축분뇨 등을 자원화하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고 영농폐기물 관리를 강화하여 농업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가축분뇨 자원순환 계획**을 통해 가축분뇨 적정사용을 유도하고 **영농폐기물 수거시설**을 확충하여 편의성 및 수거율을 높인다.

정부는 제6차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가칭)‘**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협업은 물론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 협업체계 등 추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정책 추진 상황도 정기적으로 평가·환류할 계획이다.

이시해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친환경 유기농업이 새롭게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농가 수익성 제고, 인증제도 개선 및 추진 체계 구축 등 주요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요약)
- 2. 제6차 계획 수립 경과
- 3. 제6차 계획 추진방향

담당 부서	농식품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	책임자	과 장	임영조 (044-201-2431)
		담당자	사무관	김윤수 (044-201-2435)



I. 제5차 계획 평가

- 친환경농업의 환경·안전·건강 가치에도 불구하고 제5차 계획 기간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소비는 위축
 - 관행농업 대비 수익성 부족, 유기농업자재 등 비용 상승, 과도한 인증조건 등으로 친환경 농가 이탈은 늘고 신규 진입은 제한
 - * 친환경 인증면적(비중): ('20) 81천ha, 5.2% → ('22) 69천ha, 4.6% → ('24) 68천ha, 4.5%
 - 일반농산물 대비 약 1.6배 높은 가격과, 소비자의 환경가치 인식 부족, 임산부 지원사업 폐지('23) 등으로 수요 감소
- 화학비료 사용량은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화학비료·농약 사용량은 OECD 회원국 중에서 높은 편
 - 관행적인 고투입농법의 지속과 가축 사육두수의 증가로 인해 토양, 수질, 생태계 등에 환경부하가 가중되는 상황

II. 제6차 계획 추진방향

목 표	◇ 유기/무농약 면적 비율(%) : ('24) 2.5, 2 → ('30) 5, 4 ◇ 화학비료/합성농약(kg/ha) : ('24) 233, 10.0 → ('30) 227, 9.0		
추진전략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생산 기반 확충	유통 구조 개선
		소비 기반 확대	과정 중심 인증제도로 개선
	농업환경 보전 지속 추진	농지 및 수질 보전	탄소 감축
		농업 생태계 보전	가축분뇨 등 관리 강화
추진체계	(가칭)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 및 정책 협의회		

III. 세부 추진 계획

1.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① 생산 기반 확충

-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 추진
 - 8년째 동결('18~)된 쌀·과수 단가와 소득 수준이 낮은 논 단가, 유기지속 단가를 인상하고, 유기·무농약 단가 차이도 확대
 - 필지별 지급횟수 제한기준을 완화('26)하고, 유기 직불금 지급 횟수를 보장('27)하여 신규농가의 친환경 재배 및 유기전환 독려
- 친환경 농가에게 유기농업자재를 우선 지원하고, 지원사업에 참여한 일반농가가 인증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25~)
- 친환경 농지와 연결한 농지 및 상속·증여된 친환경 농지 등은 친환경 농가에 우선 임대하도록 농지은행 제도 개선('26~)

② 소비 기반 확대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재개('26~), 친환경 벼 공공비축 매입(전량 복지용, 최대 15만톤, '25~) 등 정부 역할 확대
 -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재개(158억원, 16만명에게 매월 4만원씩 6개월간 지급, '26~)
-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교육부 협업), 녹색제품 지정(기후부 협업) 등 공공분야 수요 확대로 안정적 수요처 마련
- 일반 소비자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체험·교육 확대, 가격 부담 최소화 방안 등 인센티브 검토

③ 유통 구조 개선

- 우선 물량이 많은 **친환경 쌀**(‘24, 99천톤) 중심으로 **지역농협** 등에서 온라인 도매시장에 판매 등록하도록 장려(aT·농협 협조)
 - 농협, 대형마트 등 협업을 통해 소비자의 친환경 농산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용코너 설치**(‘27) 등 매장 환경 개선
 - 친환경 농산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광역 거점물류센터** 추가 설치에 대해서 지방정부와 함께 검토(현재 수도권, 호남권 등 2개소)
 - **유기가공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농업인, 소비자, 학계 등 협의체를 운영, 유기가공식품 산업 규제사항 발굴·개선
 - 녹차, 쌀 가공식품, 음료 등 국산 친환경 농산물 확보가 용이하고 해외에서 상품성이 있는 **수출 유망상품 발굴·지원**
- * 유기가공식품 수출액 (‘20) 10,796 천달러 → (‘24) 17,220 (음료, 녹차, 과자류 등)

④ 과정 중심으로 인증제도 개선

-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26)
-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 추가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친환경-저탄소 인증을 연계**하여 별도 인증 취득 절차 간소화 방안 검토(‘26~)
 - * **유기 벼** 등 재배방법이 정형화된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탄소 저감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현장 실증 실시 이후 **도입 추진**
-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연구용역 등을 거쳐 **친환경 인증마크를 차별화**(‘27)

2. 농업환경 보전 지속 추진

① 농지 및 수질 보전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 확산**
- 집중 관리대상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수질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농업용수 전반의 수질 개선을 위해 **수질정보 측정 인프라**를 확충

② 농업 생태계 보전

-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 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 개선
- 화학비료·합성농약 저감을 위해 **미생물 농약** 등록을 확대하고, 국내 활용에 적합한 **천적 활용 방제 기술** 및 **매뉴얼** 개발·보급

③ 탄소 감축

-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과 **저탄소 농업 유인체계** 구축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련 제도 마련
-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을 **탄소중립직불제**로 확대·개편하고, **농업 분야 탄소감축 실적의 시장거래** 및 저탄소 농업기술 등 지원

④ 가축분뇨 등 관리 강화

- ‘**지역단위 가축분뇨 자원순환 계획**’을 수립, 가축분뇨 처리 혁신 체계를 도입하는 **시범지구 3개소** 조성(~’30)
- 적정 퇴액비량을 처리하기 위해 **지역별 농·축협 중심의 ‘경축순환 협의체’**를 운영, **경종농가-축산농가 선순환 체계 확대**(‘25~)

IV. 추진 체계

① 가정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

-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 위원회는 위원장(농식품부 차관), **정부위원**(농식품부 및 관계 부처 국장급), **민간위원**(생산자·소비자 단체 등 추천) 등으로 구성
 -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필요시 분야별 분과 위원회를 운영*하고, 친환경 현장 전문가 및 연구자 등 전문가 그룹** 또는 TF 운영
- * (예시) 민간수요 확대, 생산기반 확충, 인증제도 개선, 친환경 청년농 육성 등
- ** K-농정협의체 활동에 참여한 친환경농업인 대표, 민간 전문가 등의 참여 유도

②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 농식품부와 지방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유도
- **지방정부 목표**는 지역 특성(수요자·생산지)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중앙·지방 목표**가 서로 연계되도록 설정
- 매년 정기적으로 당해 연도 실적, 성과,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다음 연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등 사전 협의

붙임 2

제6차 계획 수립 경과

□ 계획의 수립 경과

-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농정 패러다임 전환」 **연구용역 추진**(KREI, '25.4~9월)
 - 국내외 환경친화적 농업 현황과 친환경농식품 시장 규모·전망 등을 조사 분석하고, 비전·목표 수립 등 제언
 - * 주요 연구내용: 국내외 농업환경 및 관련 제도·지원 현황, 관련 시장 현황 및 전망, 농업농촌 전반의 환경친화적 개선 방안 및 중장기 활성화 방안 제시, 정책 시사점 도출 등
- **분야별 전문가·생산자·소비자로 구성된 「기획단」 발족**(4월)
 - 제5차 계획 성과 평가 및 제6차 계획 정책과제 발굴·검토를 위해 5개 분과*로 구성·운영하고, 반별 회의를 수시 개최
 - * ①정책·제도(13회), ②환경관리(3회), ③인증제도(7회), ④생산·기술(5회), ⑤유통·소비(5회)
- 정책 수요자인 **생산·소비자단체 대상 정책방향 설명 및 의견수렴**(5~7월)
 - **친환경농업계**는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요청**, **소비자단체**는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필요성 제기**
- 친환경농업 목표 재설정 관련 **자문 및 지자체 검토 회의 개최**(6~8월)
 - **목표 면적과 정책적 수단** 및 그 규모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지자체별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 및 자체 목표 설정 검토**
 - * KREI, 충남대학교, 경상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유기농업연구소 참여
- 「**함께 만드는 K-농정 협의체**(8.19. 발족)」 **친환경 소분과 운영**(8~12월)
 - 농업인·소비자 입장에서 **목표설정 및 계획수립 등 공감대 형성**
 - * 안건: ①친환경농업 목표 재설정, ②공공수요 확대, ③생산기반 확충, ④법제도 개선 등

붙임 3

제6차 계획 추진방향

비전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		
목표	<p>◇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인증 면적을 2배로 확대 * 총 경지면적 대비 유기/무농약 면적 비율(%): ('24) 2.5, 2 → ('30) 5, 4</p> <p>◇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화학비료 및 농약 감축 * 화학비료/합성농약(kg/ha) : ('24) 233, 10.0 → ('30) 227, 9.0</p>		
2대 분야 추진전략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가. 생산 기반 확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친환경농업직불 확대 ② 유기농업자재지원 확대 ③ 친환경농업 집적화 및 품목별 조직화 ④ 친환경 농지 보장성 강화 ⑤ 인력 지원 확대 및 재배기술 교육·보급
		나. 수요 기반 확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친환경농산물 공공수요 확대 ②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인센티브 ③ 친환경농산물 음식점 소비활성화 ④ 친환경 자조금 역할 확대 ⑤ 친환경농업 환경가치 인식 제고 ⑥ 소비자 교육 강화
		다. 유통 구조 개선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통 및 판매망 확충 ② 유기농식품 산업 육성 ③ 국제협력 강화 ④ 친환경 생산·유통 통계 구축
		라. 과정 중심 인증제도로 개선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과정 중심의 인증제도 강화 ② 인증마크 체계 개선 ③ 친환경·저탄소 인증 연계 ④ 유기농업자재 제도개선 ⑤ 인증기관 육성
	농업환경 보전 지속 추진	가. 농지 및 수질 보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지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확대 ② 노지 스마트팜 및 정밀농업 확산 ③ 농업용수 수질 관리 강화 ④ 농업환경변동조사 확대·개편
		나. 생태계 보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개편 ② 미생물 농자재 생산·보급 확대 ③ 친환경 방제 기술 개발·보급
		다. 탄소 감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저탄소 농업 유인체계 구축 ② 저탄소 농업 기술 개발·보급
		라. 영농폐기물 및 가축분뇨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업부산물 자원화 및 영농폐기물 관리 강화 ② 가축분뇨 자원화 및 경축순환 활성화
	추진 체계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 및 관계기관 정책 협의회	